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주식 반환·주총 금지’ 공방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윤상현, 콜마비엔에이치 주총 소집
사내이사 선임 등 이사회 재판 예고
윤동한·윤여원, 법적 대응 ‘맞붙’

최근 두 달 간 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산됐다.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간의 경영권 충돌은 결국 부자 간의 주식 반환 소송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현재 ‘삼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3일 국내 부티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이 가장 먼저 법적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 주총 안건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 재편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지난 6월 18일 대전지법은 해당 사건 심문을 종결해 콜마그룹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의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반격하고 있다. 우선,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윤 회

장 측에 따르면, 2019년 주식 증여는 윤동한 회장·윤상현 부회장·윤여원 대표 3자 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다. 당시 윤 부회장은 증여를 통해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하게 됐고, 지분율 30.25%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024년 5월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율은 윤상현 부회장 31.75%,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7.45%,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순

이다. 윤 회장 측은 지금 윤 부회장이 윤 대표 경영권과 콜마비엔에이치 경영체계를 공격하는 행보는 증여 조건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걸었다. 이 소송들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됐고, 지난 6월 27일 법원은 윤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해당 주식 규모는 콜마홀딩스 전체 지분의 14% 수준이다. 윤 부회장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윤대표는 지난 6월 10일 윤 부회장이 요구하는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약정 위반과 경영질서 파괴를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한 심문이 지난 2일 대

전지법에서 열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고, 법원은 추가 서면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지정했다. 윤 대표 측은 “지주사의 일반적 경영 개입을 막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의 부진한 실적을 지적해 왔고, 지주사 경영진으로서 그룹 전체와 그룹 내 계열사 경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엔에이치 최대 주주로 지분율 44.63%를 보유하고 있다. 윤 대표와 윤 회장의 콜마비엔에이치 지분율은 각각 7.72%, 1.11% 등으로 이뤄졌다. 또 콜마비엔에이치의 이사회의 경우 윤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인사 2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윤 회장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며 복귀한 상황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1면 ‘美-베트남 관세인하’서 계속

주요 IT기업 노조 결집… 집회·파업 등 집단행동 예고

IT업계, 노사 리스크 경고등
“관계 전환점… 갈등 예측 불가”

정보를 둘러싼 통제가 논란이던 ‘인공지능(AI) 시대의 중심’ 판교가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주요 IT기업 노조들이 결집해 강경 노선을 택하면서, 한때 ‘노조 불모지’로 불리던 판교에 노사 리스크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네이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주요 IT기업 노조들이 결집해 강경 노선을 택하면서, 한때 ‘노조 불모지’로 불리던 판교에 노사 리스크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네이버 노동조합은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정기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일 열린 3차 집회에서 네이버 지회는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의 해임을 촉구하며, 이사회와 국민연금에 각각 공문과 공개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익 제보자 색출 중단 ▲최 대표 복귀 관련 회의록 및 해명자료 공개 ▲최 대표 해임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삼아 이사회에 주주 권한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성남시 판교 1784 일대에서 네이버 노조가 최인혁 테크 비즈니스 부문 대표 해임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네이버 노조

또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세훈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변대규 전 이사회 의장이 최 대표 복귀를 주도한 책임이 가장 크다”며, 두 인물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최 대표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COO(최고운영책임자) 직에서 물러났다가, 2024년 3월 복귀했다. 이사회는 그의 복귀 직전 비공식 설명회를 열었고, 노조는 이를 ‘절차적 투명성’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카카오, 넥슨, 한글과 컴퓨터 등 23개 지회가 연대 참여해

200여명이 집결했다. 화성식품노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전 대표에게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2021년 국감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조 갈등은 이제 네이버를 넘어 판교 IT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 다른 간판기업인 카카오는 콘텐츠 CIC 분사 반대와 저성과 보상 문제를 두고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을 감행했으며, 최근 협상 재개와 함께 전면파업 계획은 유보한 상황이다. 넥슨 자회사 네오플은 성과급 축소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글과컴퓨터 노조도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개편과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고시키며, 첫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속하기 시작한 노조들을 격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IT위원회에는 카카오키지회를 비롯해 네이버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

회, 웹젠지회, NHN지회, 아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알티베이스지회,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지회, 씨디네트웍스지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구광지회가 합류했다. 업계가 결속을 우려하는 이유는 단순한 연대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교섭력을 갖춘 집단 교섭 블록으로 진화할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 지회는 비슷한 근무 환경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사안별 공동행동과 연대 집회를 반복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통 요구안이나 파업 연대가 현실화될 경우, IT업계의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운영 체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황용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IT산업은 이제야 노사관계의 전환점에 진입했다”며 “기존 제조업처럼 협상 관행이 쌓이지 않은 만큼, 갈등이 더욱 뾰족하고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산업계 ‘안도의 한숨’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

특히 베트남에 스마트폰·가전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고율관세를 피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현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며 이들 물량 중 상당수가 북미항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또한 세탁기를 비롯해 베트남 하이퐁에서 생산되는 생활가전 물량의 다수를 북미로 수출하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관세가 줄어든 부분이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베트남 외 다른 국가들의 관세 변동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긴밀하게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와 한화는 철강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에 투자하며 자본 투입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베트남에서 희토류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전략적 협력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사업의 경우 이미 중국이 미국에 의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이 많아 미국 직수출에는 한계가 있어 동남아 및 주변 국가에 생산 거점을 만들어 수출 대응 중”이라며 “환적 상품 관세 부과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양국의 협의사항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효성그룹 역시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운영 중이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발 효성 계열사 제품은 효성티앤씨의 섬유 제품과 효성티앤에스의 ATM기기가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효성의 베트남 법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세 부담까지 낮아진 만큼 현재 상황이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31억弗… 2022년 이후 최저

글로벌 관세 등 신규투자 영향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하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착 기준으로는 72억9000만달러로 2.7% 증가했으나, 신고 대비 실제 자금 유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2025년 상반기 외투동향을 발표했다. 미국

의 고율 관세 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 정치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유보된 상황이란 설명이다. 유럽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한국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받을 정도로 우려가 컸다”며 “당시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 결정이 상당수 보류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31.3억달러(+20.2%), 22.4억달러(+14.5%)의 투자신고를 기록해 선전했으나, 일본(-25.4%)과 중국(-39.0%)의 감소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유통(+73.3%), 정보통신(+9.4%) 등 서비스업이 상승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대부분 부진했다. 상반기 도착기준 외투는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여전히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제 투자 실행률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정책관은 “실체투자로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투자 건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적 안정과 미국 관세 윤곽이 드러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정책관은 “특히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관세정책이 명확해지는 7~8월 이후 신규 투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저하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